

 국토교통부	보도참고자료	
	배포일시	2019. 9. 20.(금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민간임대정책과	담당자 ·과장 최정민, 사무관 남경웅, 김보람 ·☎ (044) 201-4100, 201-4108, 4476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정당과세 실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등록임대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임대료 상승 제한(연 5%이내) 및 거주 안정성(4~8년)이 보장되는 임대주택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만큼, 정부는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.
 - 다만,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우려에 대해서는 9.13 주택시장 안정대책 등을 통하여 세제·금융 혜택을 축소 조정한 바 있습니다.
 - * 다주택자 신규취득 주택은 등록해도 양도세 증과 및 종부세 합산, 투기 지역·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대출은 LTV 40% 규제
- 혜택 조정과 함께,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(2019.1.9) 마련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관리기반 구축, 과세체계 연계 관리강화, 세제혜택 조정 및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등 다각적 측면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추진 중입니다.
 - 특히,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인상제한 등 임대조건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강화(기존 1천만원 → 3천만원)하는 제도 개선을 완료('19.10.24 시행)하였습니다.

- 그와 함께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자의 임대 의무 기간 및 임대료 상한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정기 점검하여 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추징을 강화해나갈 것입니다.
- 더불어 국세청과 협업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세금 탈루 검증을 통해 정당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공조하겠습니다.
- 현재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 등을 체계적 조사 및 관리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등록임대주택 관리를 위한 합동 전담체계(「등록임대 관리 강화 TF」)를 구축·운영 중에 있는 바,
- 정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바탕으로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, 민간임대 시장 동향 모니터링, 관련 제도 개선 및 임차인 권리보호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 검토,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한국일보, 9.20 등) >

- ◆ 30명이 1만 1029채 보유.... 투기수단 된 임대사업
 - 가장 큰손은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임대사업자로 594채 보유
 -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허용, 세제혜택을 주어 다주택자에게 투기수단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남경웅 사무관(☎ 044-201-410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